

## 이슈 1

# 코로나19, 전남지역 노동환경변화실태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몰린 취약계층노동자의 향후 전망-

## 1. 코로나19와 전남지역 노동환경실태조사결과보고

전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문보현

I. 들어가며

II.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III. 제언

IV. 맺으며,

부록/코로나19, 전남지역 취약계층 노동자의 향후 전망

-간담회 스케치-

## 2.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제안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대응시민사회대책위상황실장 주제준

## 코로나19와 전남지역 노동환경실태조사결과보고

전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문보현

### 1. 들어가며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듯 보이다가 다시 확산, 제2차 대유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간에 걸쳐 전남 지역 노동환경실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대면)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정규·비정규의 구분을 두지 않았는데, 전체응답자의 57%가 정규직(중규직인 무기계약직 포함)이고 43%가 비정규직이다.

조사결과, 코로나 19사태로 업종 구별 없이 특수형태노동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월평균 임금의 44%, 가구수입은 48% 감소되었으며, 이 수치는 전체응답자의 비정규직 비율과 유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크게 받았다. 이러한 소득감소는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서비스업 동향조사결과(전남도내 운수, 스포츠·여가, 숙박, 음식점 등에서 생산 감소가 두드러짐) 및 지역경제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사태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들 등 간접고용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의 취약계층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나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존재파악이 되어야 긴급지원체계든 지역복지전달체계든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재난 피해로 규정하고 파악 가능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가구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기본소득제 등을 고려하는 한편, 파악되지 않는 이들을 찾는 모니터링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대하여는 서울시 예를 참조). 또, 해고 없는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모델처럼 지역의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방안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 보고에는 조사결과에 덧붙여 취약계층노동자들의 처지와 요구를 공유한 간담회의 개략을 실는다.

## II. 코로나19와 전남지역 노동실태조사결과

### 1. 조사 개요

- 조사 명: 코로나19와 전남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실태조사
- 조사목적: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변화된 노동환경 파악
- 조사방법과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서면조사
- 설문조사 표본 (381명)
  - 설문 내용: 노동환경 일반사항,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여부와 재난 특별지원금에 대한 의견 등 총 13문항
  - 온라인은 도내 지역별 할당 500명(중 회수 129명으로 회수율 25.8%)+대면조사(252명)
  - 대면조사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시와 보성, 무안, 영암 등 3개 군에서 시행함.
- 조사기간: 2020년 5월 8일부터 5.21일까지(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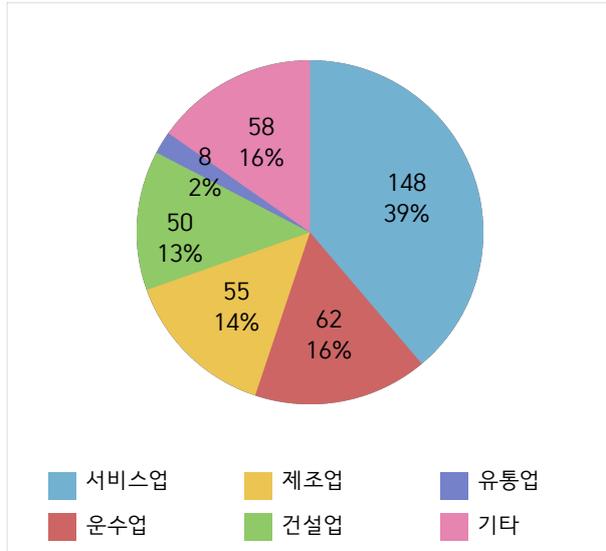
### 2. 주요결과 요약

#### 1) 조사대상 업종

- 조사 대상은 대면 접촉 기회가 많아 코로나19에 노출위험이 높은 업종순으로 서비스업(학원,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업 등), 운수업(택시, 전세(관광)버스),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등 5개 업종과 기타로 분류함.
  - 전체 응답자의 업종별 비율은 서비스업 39%, 운수업 16%, 제조업 14%, 건설업 13%, 유통업 2%, 기타 16%로 나타남.
  -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구체적인 직업, 업종을 기재, 사무직(11명), 교육업(11명), 요양보호사(6명), 사회복지(5명), 보험설계사(4명), 보육교사(3명), 판매직(2명), 환경, 프리랜서, 미화, 발골, 방역소독 각각 1명이며, 사무직과 발골 외에는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능.
  - 서비스 업종에 기타를 포함시킬 경우 대상자의 과반을 차지함.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비 고
서비스업	148	39	-
운수업	62	16	-
제조업	55	14	-
건설업	50	13	-
유통업	8	2	-
기 타	58	16	-
계	381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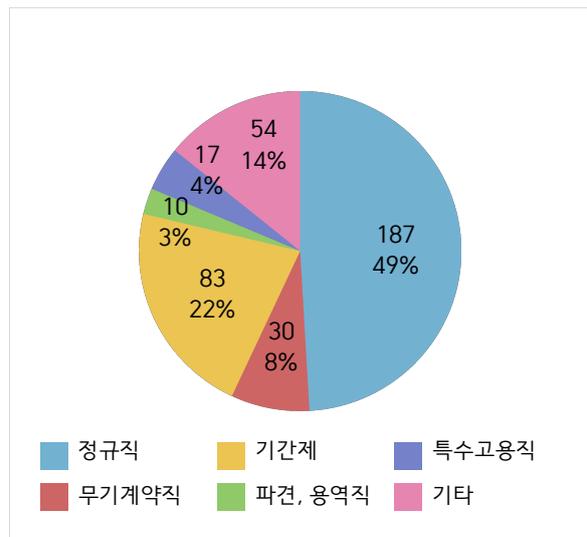
[도표1] 업종분류

## 2) 노동계약 형태

- 노동계약의 형태는 정규직이 전체 응답자의 49%, 기간제 22%, 무기 계약직 8%, 특수고용직(특수형태노동자) 4%, 파견·용역직 3% 순으로 나타남.
- 기타를 선택한 14%는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시간강사, 수습 등으로 현재 고용상태를 표시, 중규(中規)직인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 직군이 43%를 차지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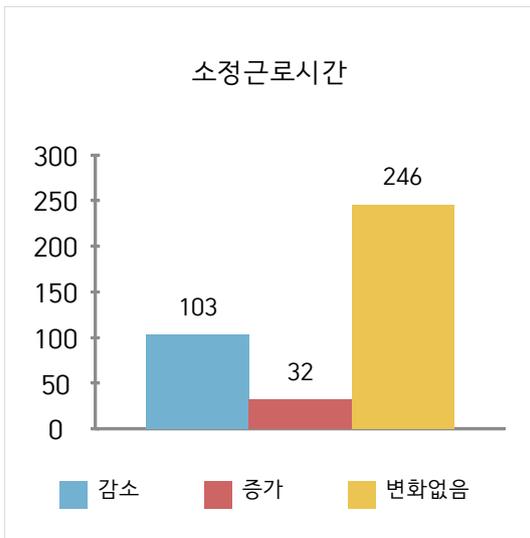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비 고
정 규 직	187	49	정규
무기계약직	30	8	중규
기 간 제	83	22	비정규
파견·용역직	10	3	"
특수고용직	17	4	"
기 타	54	14	"
계	381	100	-



[도표2] 노동 계약형태

### 3) 노동시간의 변동 여부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동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는 변화 없음으로 답하였고, 27%는 감소, 8%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간외 노동시간은 대체적으로 소정노동시간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변화 없음 65%, 감소 27%, 증가 8%임.
  - 노동시간의 감소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간 조정이 쉬운 비정규직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임.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비 고
감 소	103	27	-
증 가	32	8	-
변 화 없음	246	65	-
계	381	100	-

[도표3-1] 소정노동시간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비 고
감 소	103	27	-
증 가	33	8	-
변 화 없음	244	65	-
계	381	100	-

[도표3-2] 시간외 근무

### 4) 코로나19사태 발생 전후 월평균 임금액 변동여부

-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받았던 월평균 임금액은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31%를,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19%, 100만 원 미만 14%,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과 350만 원 이상도 각각 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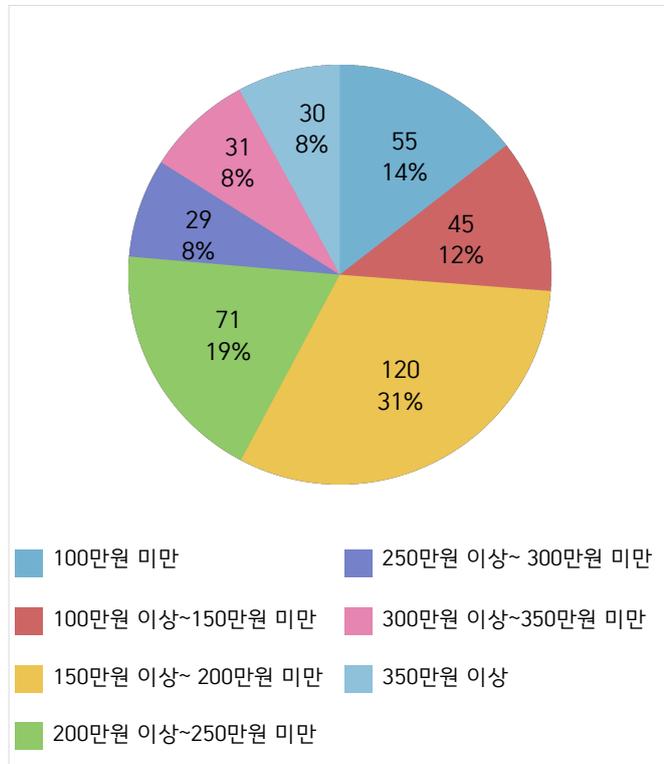
- 250만 원 미만이 전체응답자의 76%를 차지, 전남도 5인 미만사업 상용 월 평균급여 323만 원(3,235천원)보다 70만 원 이상 적으며,
-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2019년 월 임금총액(정액+초과급여+연간특별급여/12개월의 합) 314만 원(3,138천원)보다 전체응답자의 급여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정규직 3,612천원, 비정규직 1,643천원, 기간제 2,440천원, 파견·용역 2,027천원  
일용 1,569천원(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향 참조)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104&leftMenuId=0010001100101vwCdVal=MT\\_ZTITLE&upListVal=118\\_159](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104&leftMenuId=0010001100101vwCdVal=MT_ZTITLE&upListVal=118_159)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비 고
100만원 미만	55	14	-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	45	12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	31	-
200만 원 이상 250만원 미만	71	19	-
25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	29	8	-
300만 원 이상 350만원 미만	31	8	-
350만 원 이상	30	8	-
계	381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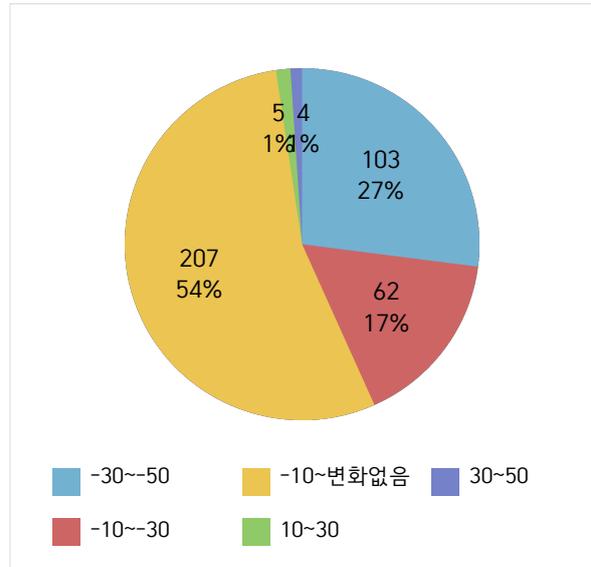


[도표4] 코로나19사태 발생 전, 월평균 임금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임금 변동에 관하여, 전체응답자의 54%가 10%감소~변화 없음으로 답하였고,
  - 30~50%감소는 27%, 10~30%감소 17%, 반면 증가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였으며, 10~30%와 30~50% 증가도 각각 1%로 나타남.
  - 코로나19사태로 월평균 소득감소는 전체 응답자의 44%를 차지, 10%내외의 감소를 감안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소득감소 상태임.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비 고
-30% ~ -50%	103	27	-
-10% ~ -30%	62	17	-
-10% ~ 변화 없음	207	54	-
10% ~ 30%	5	1	-
30% ~ 50%	4	1	-
계	381	100	-



[도표5] 코로나19사태 발생 후, 임금변화

### 5)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새로운 업무추가 및 직원감원여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 추가 여부에 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1%가 업무추가 없음으로 답하였고, 19%가 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비 고
그 령 다	74	19	-
그렇지 않다	307	81	-
계	381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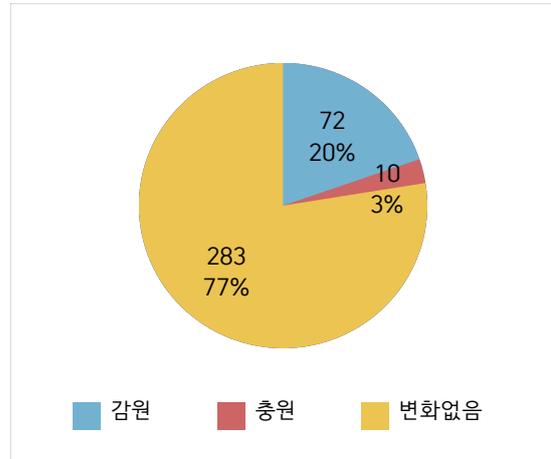


[도표6] 새로운 업무추가여부

-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직원 감원 여부에 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변화 없음, 감원 20%, 충원 3%로 나타나, 감원은 인원조정이 쉬운 일용,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함.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비 고
감 원	72	20	-
총 원	10	3	-
변화 없음	283	77	-
계	365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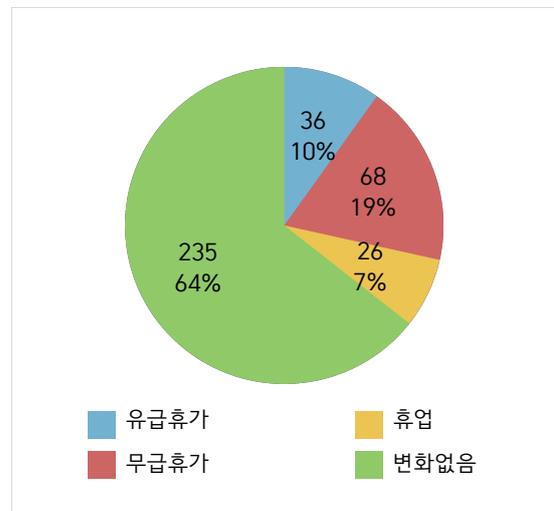
[도표 7] 회사 직원 감원 여부

## 6)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휴가사용 여부 및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사용은 변화 없음이 전체 응답자의 64%, 무급휴가 19%, 유급휴가 10%, 회사의 휴업 7% 발생.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비 고
유급휴가	36	10	-
무급휴가	68	19	-
휴업	26	7	-
변화 없음	235	64	-
계	365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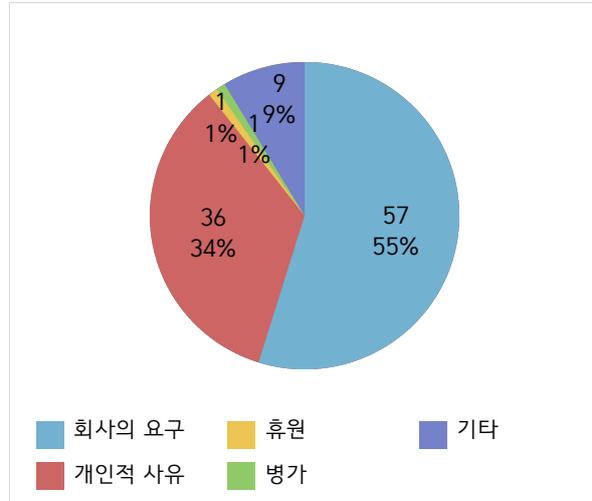


[도표 8] 휴가사용 여부

- 휴가사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29%이며, 휴가사용 이유로는 회사요구 55%, 개인사정 34%, 휴업(어린이 집 등)으로 인한 휴가상태 7%임.
- 정규직군에서는 휴가 사용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과 큰 변화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일감감소에 따른 노동자의 수급조정 방안으로 유급휴가 → 무급휴가 → 휴업 등을 이용하고, 경영이 더 악화되면 해고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음.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비 고
회사의 요구	57	55	-
개인적 사유	36	34	-
휴 원	1	1	-
병 가	1	1	-
기 타	9	9	-
계	104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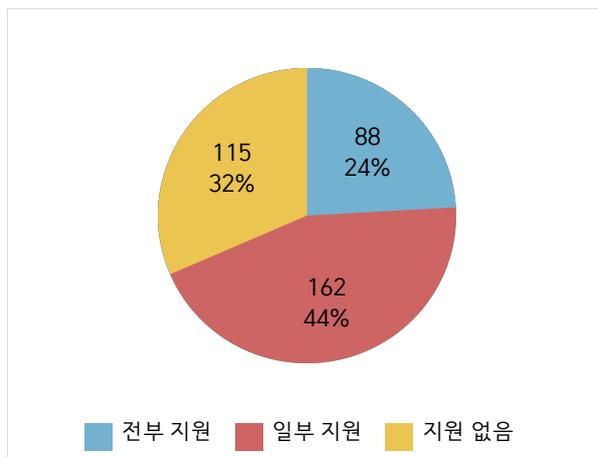
[도표 9] 휴가사용 사유

###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회사의 지원 여부

-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지원(방역물품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여부에 대해, 일부 지원 전체 응답자의 46%, 전부지원 23%로 사업장의 지원은 69%로 나타남.
- 한편, 지원 없음이라는 응답이 31%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며, 이를 통해 감염증에 대한 예방 인식과 노력 부족, 긴장감 결여 등,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비 고
전부 지원	90	23	-
일부 지원	174	46	-
지원 없음	117	31	-
계	381	100	-



[도표10] 코로나19 예방도구 지원여부

### 8) 가구구성과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가구 소득 변동 여부

○ 일반사항으로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4인 가구가 전체 응답자의 29%를 차지하며, 3인 가구 22%, 2인 가구 18%, 1인 가구 16%로 나타남.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비 고
1인 가구	61	16	-
2인 가구	67	18	-
3인 가구	85	22	-
4인 가구	109	29	-
5인 가구 이상	59	15	-
계	381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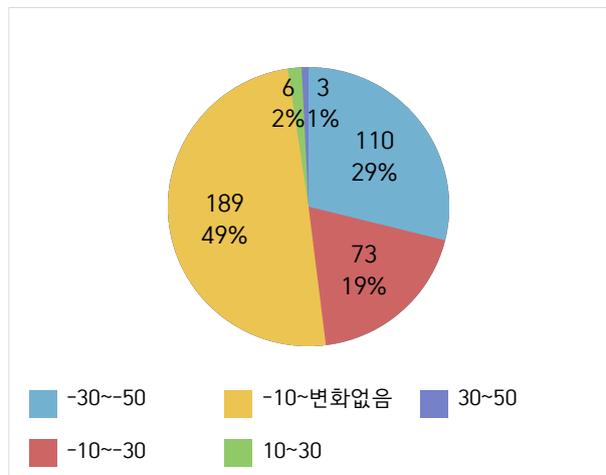


[도표11] 가구 구성

○ 코로나19사태 발생 후에 가구 소득의 변동 여부, 변동이 있었다면 월 평균가구 소득 몇 %의 증감이 있었는지 대해,  
 - 전체 응답자의 49%가 10%감소~변화 없음으로 답하였고,  
 -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이며, 30~50%감소가 29%, 10~30% 감소가 19%로 나타나,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비 고
-30% ~ -50%	110	29	-
-10% ~ -30%	73	19	-
-10% ~ 변화 없음	189	49	-
10% ~ 30%	6	2	-
30% ~ 50%	3	1	-
계	381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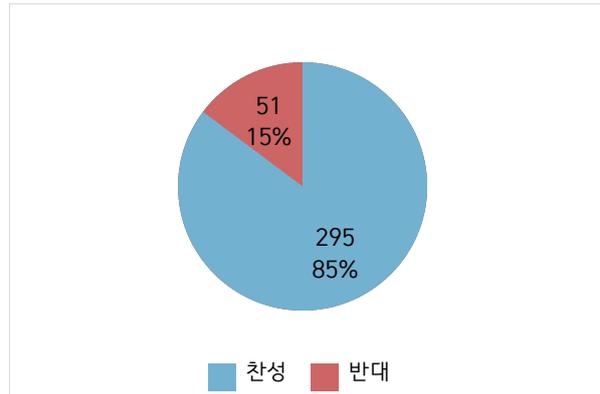
[도표12] 가구 소득의 변동

### 9)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특별지원 여부

-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와 확산 등의 여파로 실업증가 등 고용유지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에게도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 대구의 예에 따라 전남도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전체 응답자의(381명 중 346명 응답) 85% 찬성, 15%가 반대함.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 율	비 고
찬 성	295	85	-
반 대	51	15	-
계	346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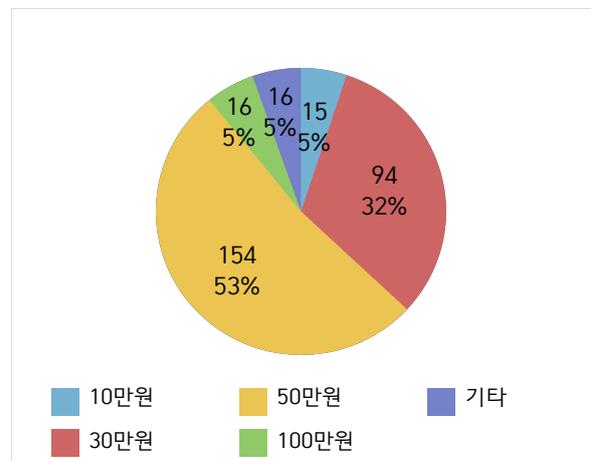


[도표13] 특수고용·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에의 특별지원여부

- 특수고용·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의 특별지원에 찬성한 경우, 지원금의 적정액에 대하여,
  - 전체응답자의 53%가 50만 원을, 31%가 30만 원, 6%가 100만 원, 4%가 10만 원을 적정하고 봄.
  - 기타 6%(16건)의 내용은 20만원 1건, 40만원 1건, 70만원 1건, 70-100만원 1건, 150만원 3건, 급여50% 1건, 자녀수 비례1건, 평균금액 3건, 미기재 4건임.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 수	비 율	비 고
10만원	15	5	-
30만원	94	32	-
50만원	154	53	-
100만원	16	5	-
기 타	16	5	-
계	295	100	-



[도표14]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금의 적정금액

### 3.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로 크게 변화된 노동환경은 전남 지역의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피해주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세계적으로 제조업 생산력저하, 수출부진 등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과급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채찍효과로,

- 업종 구별 없이 특수고용, 프리랜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취약계층은 노동시간의 단축, 가구 소득 감소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사용 권유, 휴업, 감원 등 잉여인력 정리 우선 대상, 코로나19 방역(예방)도구도 지급치 않는 곳도 31%.

- 정규직군(무기 계약직인 중규직 포함)과 같이 고용이 안정된 경우는 노동시간단축과 휴가사용에 대해서 코로나19사태 발생이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 없음(전체 응답자의 65%). 다만, 코로나19 경제충격과 포스트 코로나기에 나타나게 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회사 내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함.

-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시간단축(전체응답자의 27%)과 휴가사용[전체응답자의 29%(휴업포함 36%), 이중 55%가 회사의 권유로 사용함]

- 코로나19 여파로 일감부족상태에 놓인 기업이나 사업장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비정규직군에 대해 노동시간단축, 휴가 등을 먼저 적용하므로 이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짐.

○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도 14%, 250만 원 미만 76%.

-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76%가 코로나19사태 이전, 월 평균 임금액이 250만 원 미만으로 전남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 월평균임금액(3,235천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의 월 임금총액(3,138천원) 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 운수업(택시, 관광버스 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객 감소에 더해 2020.

1.1.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남노동권익센터 ‘이슈페이퍼’ 1호 참조 <http://jecec.kr> (자료실 탑재)

○ 임금감소 전체응답자의 44%, 가구 소득의 감소 48%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응답자의 44%가 임금이 감소(이 중 30~50%감소 27%, 10~30%감소 17%), 가구 소득 또한 48%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이 중 30~50%감소가 29%, 10~30%감소 19%).
- 전체응답자 중 정규직군과 비정규직군 비율이 각각 50%대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군의 소득감소가 큰 것으로 보임.

○ 특수고용·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에게의 특별지원에 대하여, 전체응답자(381명중 346명 응답)의 85%가 찬성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별지원금의 적정액으로 전체응답자의 53%가 50만 원, 31%가 30만원으로 응답, 전체의 84%가 30만 원~50만 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기타, 직전 급여의 반액, 자녀수에 비례 등의 의견이 있었음.

## □ 코로나19사태로 전남도내 서비스생산 감소, 물가상승, 실업률증가

○ 2020년 1분기 서비스업동향조사(통계청 5.7일 발표)결과에 따르면,

- 전남의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0.4%감소, 운수·창고(-11.4%),예술·스포츠·여가(-8.4), 숙박·음식점(-7.3%),협회·수리·개인(-7.2%),교육(-2.2%) 등의 생산 감소가 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증가업종은 금융·보험(8.2%), 보건·사회복지(3.0%)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대출과 소상공인의 사업대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나타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2260&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2260&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2020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통계청 5.20일 발표)에 따르면,

- 전년동분기대비 광공업생산(1.6%)증가, 서비스업생산(-0.4%), 건설수주 감소 (-30%, 토목은 -56.8%), 수출(-11.5%) 및 수입 감소세 지속, 소비판매 상승 (3.9%), 소비자 물가 상승(1.3%), 고용률(0.9%p)과 실업률(0.3%p) 상승, 인구이동 순유출(-7,421명)
- 토목공사 감소율이 -56.8로 두드러져 건설업 관련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 조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254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254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2) 제언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가구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전방안(기본소득보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익감소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책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으로 고안되어야 함(해고 없는 도시 모델-전주시의 기업과 노동자의 지역적 상생).
- 특수고용·프리랜서 업종에 종사, 현행 제도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서울, 대구 등지에서는 이미 특수고용·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을 하고 있음(각각 50만 원을 지원하여, 정부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지원금과 별도로 구성).
- 코로나19 사태 영향은 2020년 1분기 전남 도내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택시, 관광버스 등의 운송, 예술·스포츠·여가(관광업계 등), 숙박·음식, 교육(학원 등)등의 서비스업종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유지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사각지대 모니터링단 사업 시행.
  -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

특수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의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서 긴급지원체계든 지역복지전달체계든 편입시켜야 함.

- 서울시의 운영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코로나19 사회경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제안 6장 참조).
- 긴급지원체계 및 지역복지전달체계는 한국형사회부조를 상정할 수 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나 기본소득보장 등의 제도가 마련되기에 앞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Ⅲ. 코로나19와 전남지역 취약계층노동자 향후 전망간담회(개략)

#### ※ 일러두기

참가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함. 선출직 공직자(도의원)는 실명으로 적고, 그 밖의 참가자는 직무, 업종, 직업명 등으로 적음.

#### 1. 개최 취지 등

- 코로나19사태의 확산과 장기화 속에서 전남지역 노동환경실태와 향후 전남 경제위기에 따른 각 업종 취약계층 노동자들과의 정보 공유.
-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상을 확인하고, 향후 지원 대책 방향과 내용을 모색 해보고자함.
- 개최일시장소: 2020.6.12. 10:30~12:15(105분), 전남노동권익센터 교육실
- 참가자(17명)는 조옥현(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입법팀(2명), 전남도중소벤처과(2명), 특수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 일용노동자, 방과후 교사 등(9개 업종), 전남노동권익센터(3명)
- 자유토론 형식으로 참가자의 해당 업종동향과 코로나19사태 발생 이전과 이후 현재 자신의 경제적 피해(재난 피해)상황, 그리고 이의 완화 방안(정부, 전남도의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에 관한 의견 개진으로 마무리 순으로 진행.
  - 토론 중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밝힐 수 있음을 고지함.
  - 발제내용은 코로나19와 전남지역 노동환경실태조사결과와 경제동향

## 2. 참가자의 의견 등

- 조옥현 의원: 4대 보험을 드는 것은 인간다워질 수 있는 인간 권익의 문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지역 경제는 물론 전국,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충격을 가져왔다. 도내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 특히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도의회에서는 프리랜서 지원관련 조례발의를 준비 중이다.(발언 중에서)*

- 노동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장들을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보호를 받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음.
-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관심을 갖는 환경이 필요함.
-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몰린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음.
- 현재 도의회에서 준비 중인 프리랜서 보호 관련 조례 대상범위에 특수형태 노동자도 포함되도록 하겠음.

- 운수업(택시): 코로나사태로 운송수입금 저하, 회사는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미달자 징계로 이종고를 겪고 있고, 월급제로 전환은 무산됨.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운전자가 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가져다주고 급여를 받는다. 일정액 이상의 영업수익을 올리면 때는 인센티브를 받는 월급제형태), 제도 도입을 거부한 회사들은 과거처럼 일정금액 납부요구(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코로나사태로 승객감소에도 기준금 납부강요, 미납시 가불장을 쓰게 하거나 이에 불복하면 승무정지 징계를 하여, 이종고를 겪고 있다(발언 중에서).*

- 전남도에서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한 지역상품권(50만원)을 받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데다가 코로나사태가 겹치면서 승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택시노동자가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 교통행정당국에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감독하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어서 답답함.
- 현재 법인택시는 거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제로 회귀하여, 코로나사태가

택시업계의 월급제 정착을 결과적으로 무산시켜버림.

- 조선업일용노동자: 전남의 조선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는 하도급, 물량팀의 비정규직의 유령노동자들, 조선 산업의 불황은 장기적으로는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어서 고용안정이 최우선임.

*대불의 조선 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은 하도급, 물량팀(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의 관계 수급인-이른바 노동자로 고용지표에 안 잡히는 유령노동자)이다. 조선소의 수주는 올해 작업분량 밖에 없는데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현재 수주가 없는 상태다. 전남을 떠받치는 대불 경기는 수년째 계속 악화일로인 길을 걷고, 여기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재난까지 길어지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어서 고용유지책이 절실하다(발언 중 강조한 부분).*

- 수년 만에 찾아온 조선 경기의 회복 조짐은 코로나사태로 꺼져버려 걱정임.
- 대불 산단의 조선관련 사업장은 일감이 줄어 인원을 감축하고, 현대삼호중공업 1, 2차 협력업체들은 기성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삭감되는 통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금융기관대출로 메꿔나가고 있는 실정임.
- 일용노동자들은 유급휴직이니 무급휴직이니 하는 개념이 없어, 고용유지지원금하고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로 들림.
- 아무튼 정부나 전남도에서 취약계층노동자들에 뭘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중소기업장의 고용유지책이 제일 절실함.

- 운송업화물차주: 코로나19로 수주격감, 수입도 줄어들어 속 만 타들어 가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화물차 할부금 무이자 대출이라도 도와주면 숨통이 조금은 트이겠음.

*코로나 사태로 주된 운송 거래처였던 대불 산단에서 나오는 화물이 끊어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여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는 하나 뭐 이렇다 할 지원도 못 받는데다, 화물차 할부도 갚아야 하는데, 일이 없다고 마냥 놀 수도 없고, 코로나가 길어지면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 속이 탄다(발언 중에서).*

- 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조건에 맞는 사람만 50만원씩 받는데, 특성상 운송료가 30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 코로나19로 타격입기 전인 12월~1월 수입이 지원금 지급 기준인 3~4월에 수

입이 되어, 전체 소득이 줄어도 3~4월 수입이 높아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현재 상황은 매월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할부금을 어떻게 변통할까, 속은 타 들어가고, 뽕족한 해결방법은 없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임.
-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용안전지원금 형태로 차량 할부금이라도 긴급무이자 대출을 해줘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만 막아줘도 숨통이 트이겠음.

- 보험설계사(모집인): 코로나19로 대면업무 곤란, 계약자 소득감소로 계약해제, 수당 줄고 계약수수료 반환에 더블펀치를 맞고 있음.

*보험설계사(모집인)들은 급여가 아닌 수당으로 소득을 얻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어려워 영업을 못하니 받을 수당이 없고, 게다가 경제형편이 어려운 계약자들은 계약해제를 해,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라 정말 힘들다(발언 중에서).*

-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곤란해서 보험설계나 모집영업을 전혀 할 수 없음.
- 또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보험계약 해제로 이어져, 기 계약수당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처지여서 연쇄부도라는 게 이런 걸까 싶음.
- 현재 고용노동지청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신청을 해두고 결과 대기상태임.
- 보험설계사 역시 여기 함께 자리한 여러분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인데, 이런 재난 상황이 되고 보니, 다른 업종보다 경제적 손실, 피해가 더 큰 것 같음.
- 통상 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카드대금 등을 막을 일도 걱정임.

- 건설일용직노동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건설현장에서 쉽게 채용하도록 건설사나 업체에 정부, 지자체의 고용유지금 등의 지원책이 필요함.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평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어찌 보면, 코로나종식 이후, 사회적 과제로 다뤄야 할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발언 중에서).*

- 건설현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짝 임금에 고용해서 건설시장의 노임단가를 낮추는 등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있음.
-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건설현장으로 찾아들어오면, 더욱 건설시장의 단순노동자 임금이 떨어질 우려가 큼.

- 현장에서 불법취로를 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보호차원과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마련 차원에서 내보내야 함. 보호차원이라 함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도 할 수 없는 한국사회에서는 유명과 다름없는 신세라서 쉽게 노동착취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있다는 점 때문임.
- 정부나 지자체에서 등록이주노동자를 제외하고 내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건설사나 업체에 고용유지 혹은 창출 지원금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함.

- 문화예술단원: 지방정부 행사라도 지혜를 짜내 새로운 방식으로 치렀으면 하는 바람. 비대면 공연 등으로 발상 전환하면, 어떻게든 이 난국을 극복해 낼 수 있겠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예술단 같이 다행이 4대 보험을 든 곳은 무급휴직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1인 창작단이나 영세한 문화예술단체 들은 예정되었던 행사 취소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여 해체 위기에 처한 곳 도 있다. 특히, 행사를 취소한 행정청은 무조건 회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전통방식이 아닌 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발언 중에서).*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두들 다중이 모인 곳을 피하고 집에서 지 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었음.
  - 이럴 때 일수록 오히려 문화공연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함. 외국의 예술단이 마스크를 쓰고 관중 없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상만 전환하 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함.
  - 행정관청 등의 예약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3밀주의 만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황에 맞는 공연방식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겠음.
  - 문화예술진흥은 한 나라의 국격, 품격, 시민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 보기에 모두가 고통 받는 이 재난 국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활동을 진작시키는 것도 코로나극복 방안의 하나라 생각함.
- 대리운전사업자: 코로나19로 대리운전 시장에 너도나도 끼어들어 우후죽순으 로 생겨난 업체로 시장판도가 뒤바뀜, 무책임, 서비스저하, 재난시대의 어두 운 모습, 대리운전업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임.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쉽게 차릴 수 있는 대리운전업체를 시작, 시장 질서혼란, 무책임한 업체들은 프리랜서에게 과다수수료 징수하고, 한편 수입을 얻으려는 프리랜서들은 고객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등, 막보시기 식으로 손님을 대해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발언 중에서).

- 코로나 국면이 길어지면서 실업자 혹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한두 번 아르바이트로 해본 경험으로 대리운전시장에 진입, 현재 목포만 150개 업체가 생겨남.
- 이들 업체는 프리랜서 대리기사들에게 과다한 수수료(보험+웹사용료 등)부과하고, 대리기사들은 부담하는 수수료만큼 더 벌기 위해 요금으로 고객과 마찰을 빚기도 함.
-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노동자는 업체가 고용보험납부 부담도 없고, 형식적으로는 사업자여서, 고다자(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임.
- 대리운전업을 신고제에서 인,허가제 등으로 바뀌,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리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 교사: 학교가 열리지 않아 수업을 못하니 수입이 0원인데, 사업자 취급을 하여 지방긴급생활 자금을 주지 않더라. 무늬만 사업자지 노동자인데

개인사업자인 방과후 교사, 하는 일은 노동자인데, 이번 지방긴급생활자금도 받지 못했다. 지급기준은 2018년이라는데, 코로나사태로 생활 곤란을 겪고 있는 현재 당장 필요한 게 지원금 아닌가, 그런데 지난 시점의 수입으로 지원기준을 삼는다면, 그게 뭔지 모르겠고 잘 이해가 안 된다(발언 중에서).

- 현재 학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휴업상태로 수입은 0원 임.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교사를 교육과 보육 구분법으로 접근,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예능실습, 보육 등)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는 움직임도 있어, 방과후 교사 지위에 대한 혼란을 겪음.
- 학교 급식을 돈 주고 사먹으려 해도 외부인 취급을 당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함.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음.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유행되면서 사회적인 모순들이 하나 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방과후 교사의 어정쩡하고 애매한 지위가 조금 확실히 정리되었으면 함.
- 지방 긴급생활자금지급 기준이 왜 2018년인지, 지금 당장에 수입이 없어, 경

제적 곤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생활자금을 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음.

- 운수·관광(전세)버스운전사: 관광수요 격감으로 소득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는데, 고용안정지원금도 한 푼 못 받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노동자들은 전남도로부터 긴급생활비로 50만원을 받았는데, 화물차나 관광(전세)버스는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다(지자체에 따라 다른 순천은 화물, 전세버스기사에게 50만원 지원, 목포시는 지원 없음). 도에서 시급히 지원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발언 중에서).*

- 코로나19 발생 후로 전세출퇴근 버스운행 업무 외, 여행 등의 관광관련 일은 전혀 없음.
- 현재 급여는 기본급인 세금공제 전 143만원, 세금 공제 후 130만 원대. 벌써 수개월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 받고 있음.
- 전남도에서는 택시업계에는 긴급생활자금으로 개인당 5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화물이나 관광(전세)버스는 못 받음. 순천의 경우에는 화물, 관광(전세)버스노동자에게도 50만원씩을 지급하였는데, 목포는 지급안함.
- 지자체가 뭔가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함.

- 학교예술강사: 의료보험 빼고 3대 보험 가입, 근무일수 미달로 실업급여 못 받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비정규노동자임

*학교예술강사들은 3월 첫 수업부터 12월 마지막 수업까지 8~9개월간 수업 시간(45분)을 기준, 1달 수업시간 수로 임금계산, 의료보험 빼고 3대 보험은 가입되나, 실업급여는 근무일수 미달로 수급조건이 안 된다. 말이 좋아 예술강사지 파견·용역직의 비정규노동자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학교교육의 다양화 등의 미명아래 고용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놓인 노동자다(발언 중에서).*

- 현재 코로나19사태로 학교가 수업이 없어 수입은 0원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서 선발된 예술강사들은 1년에 약 8~9개월간 수업하며, 임금은 시간(45분)당 정해진 보수에 1달 수업시간 수를 곱한 금액임. 여기서 의료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등 3대 보험은 가입되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에 미달되어 받을 수 없음.

-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강사자격을 가지고, 정규수업시간에 활동하기에 방과후 강사와 일의 형태가 다르고, 학교, 교육청 등과 직접계약관계가 없어, 용역, 파견직에 속함(계약당사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임).
- 청년일자리, 학교교육의 다양화 등의 그럴싸한 명목아래 어정쩡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우선, 실업 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줬으면 함.

### 3. 의견 정리

-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 세계적인 확산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형태노동자(화물차주·관광(전세)버스·보험설계사·대리운전원·방과후교사 등), 간접고용노동자(파견·용역)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노동자들이 다른 노동계약형태의 노동자보다 소득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컸음.
- 정부, 지자체는 코로나19사태를 “긴급 재난“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노동자의 긴급생활지원에 대한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전남도가 지난 3월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감소된 택시업계에 지급한 긴급생활비는 택시업계에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으나,
  - 화물운송 및 관광수요의 격감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이들 노동자에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대응을 달리하여, 지급한 곳과 그러하지 아니한 곳이 병존함으로써 소외, 차별 혹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형평성에 비춰 봐도 문제가 있음.
  - 코로나관련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절차 및 취급기관, 창구 등에 관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간담회는 시간 제약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에 관한 충분한 논의, 토론을 거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을 어떻게 하면 함께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 있었음.